전장에서 시장으로 :
중국-동남아 관계의 지속과 변화

박 사명 **

I. 문제의 제기


* 이 논문은 2001년도 강원대학교 기성회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smpark@kangwon.ac.kr
에서 넓전중식 이후 상호의존적 ‘시장’으로 전환되는 양태와 동일을 구명함으로써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한 객관적 전망을 탐색할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에 집중하는 중국 중심적 편향이 아니면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전략적 대응에 집중하는 동남아 중심적 편향이 십각하다. 중국과 동남아의 지극히 비대칭적인 세력균형을 고려할 경우 전자는 일반적으로 중심부적 시각이 두드러지며, 후자는 전반적으로 주변부적 시각이 두드러진다. 전자의 경우 중국의 ‘주동적 선택’을 중심으로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를 조명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그에 대한 동남아의 ‘피동적 대응’을 중심으로 중국-동남아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중국이나 동남아의 어느 일방을 부각하는 점에서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정태적이
다.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작용에 동원되는 정치적 및 경제적 차원의 배분구조가 정책적으로 고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과 동남아 각국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대한 포괄적 조명이 필요하다.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는 중국 및 동남아 각국의 국내적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및 지정학적 조건 및 세계적 조건의 변화를 반영한다. 기존의 연구는 그와 같은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요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중동적 접근이 아니라 어느 한 차원의 요인만을 부각하는 단선적 접근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권력배분에 주목하는 현실주의(realism) 시각과 국가적 차원의 이익배분에 주목하는 자유주의(liberalism) 시각은 모두 물질주의적 편향이 심각하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관념적 측면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에서는 국가적 정체성(identity) 및 이익(interest)의 변화가 국제적 차원의 구조적 조건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국제관계를 구성, 해체, 재구성하는 역사적 과정(process)이 부각된다. 따라서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의 관념적 요인과 물질적 요인에 대한 중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2차대전 이후 대외적 민족해방과 대내적 사회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중국과 동남아는 각각 밖으로부터 냉전체제의 고착, 이완, 해체 등 세계적 차원의 조건과 안으로부터 정치체제의 형성, 군연, 전환 등 국가적 차원의 조건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를 구성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는 현실적으로 강권적 일방주의(unilateralism)에서 외교적 양자주의(bilateralism)를 거쳐 제도적 다지주의(multilateralism)까지 급속하게 변화하는바, 그와 같이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중첩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중국-동남아 관계의 계속성과 가변성을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방주의적 패권주의, 양자주의적 주권주의, 다지주의적 지역주의 등 중국-동남아 관계에서 드
이라는 다양한 양상을 체계적으로 구명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에 대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접근시각


그러나 정체적이고 일면적인 이론은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현실에 대한 적실성을 상실한다. 냉전중식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각종 이론이 구성하는 정체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역동적 변화를 과시한다. 그 점에 있어서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주

의 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내포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역질서의 가능성은 ‘계속혁명’과 ‘혁명수출’을 추구하는 혁명적 일방주의에서 ‘경제발전’과 ‘주변안정’을 모색하는 외교적 양자주의를 거쳐 ‘상호의존’과 ‘지역통합’을 지향하는 제도적 다자주의까지 나아가는 역사적 전전에서 그 단초가 발견된다. 일방주의적 ‘홉스문화’의 폐허에서 양자주의적 ‘로크문화’가 부상하고, 동시에 다자주의적 ‘깐트문화’가 태동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한 문화변동이 새로운 다자주의적 지역질서의 제도화에 기여할 가능성 여부는 이제 강자와 약자를 막론하고 다양한 주체의 규범적 지향과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외 연구동향은 전반적으로 심각한 편향성을 드러낸다.첫째, 중국-동남아 관계의 형성과 변화를 주도하는 행위주체로서 언제나 중국을 설정하는 대국 중심적 편향이 심각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대국(강자)의 역할을 파악하려는 이론적 편향은 소국(약자)의 역할에 관한 파고평가를 초래하는바, 예컨대 제국주의에 대한 동남아 각국의 성공적 쟁탈이나 미국 및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효과적 항쟁을 외면한다.둘째, 중국-동남아 관계의 공간적 조건으로서 세계적 차원의 세력구조에만 주목하는 거시적 편향이 심각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세계적 차원에만 주목하는 편향적 시각은 국가적 차원의 동인에 대한 과소평가로 귀결되는 바, 예컨대 중국의 정치변동이 중국-동남아 관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간과한다.셋째, 중국-동남아 관계의 시간적 조건으로서 과거의 기억에만 집착하는 전통적 편향이 심각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과거의 경험을 과대 평가하는 편향적 시각은 미래의 변화에 대한 과소평가를 수반하는바, 중국과 동남아의 자유무역지대 기획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 점에 있어서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는 그 주체적 조건에 있어서 강자의 패권성과 약자의 정체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을 요구하고, 그 공간적 조건에 있어서 세계적 차원의 권력구조와 국가적 차원의 정치변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층적 접근을 요구하며, 그 시간적 조건에 있어서 냉전시대 ‘전쟁’의 이원적 권력구조와 냉전 이후 ‘시장’의 다원적 경제변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역동적 접근을 요구한다.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갈등적 세력균형을 부각하는 현실주의적 시각과 상호의존적 이익균형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은 새로운 제도형성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에 유기적으로 포섭될 수 있다. 현실주의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은 물질적 조건을 강조하는 반면, 구성주의적 시각은 물질
적 조건과 관념적 조건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현실주의적 세력균형과 자유주의적 이익균형이 구성주의적 결사형성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 표 1. 전략문화와 국제제도

<table>
<thead>
<tr>
<th>전략문화</th>
<th>주제</th>
<th>기본가치</th>
<th>중심이익</th>
<th>체계</th>
<th>정조</th>
<th>무력수단</th>
<th>국제제도</th>
</tr>
</thead>
<tbody>
<tr>
<td>흉스문화</td>
<td>적대</td>
<td>공존부정</td>
<td>상대이익</td>
<td>위협</td>
<td>강권</td>
<td>최대공동</td>
<td>일반주의</td>
</tr>
<tr>
<td>로크문화</td>
<td>경쟁</td>
<td>주권존중</td>
<td>절대이익</td>
<td>교환</td>
<td>외교</td>
<td>최소제한</td>
<td>양자주의</td>
</tr>
<tr>
<td>칸트문화</td>
<td>연대</td>
<td>공존공영</td>
<td>공동이익</td>
<td>통합</td>
<td>제도</td>
<td>전면배제</td>
<td>다지주의</td>
</tr>
</tbody>
</table>


III. 전장의 일방주의

국제제도의 일종으로서 일방주의는 국가주권을 절단적으로 부정하는 형식적 일방주의와 형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부정하는 실질적 일방주의로 분류된다. 형식적 일방주의의 전형적 사례는 제국주의 식민체제이며, 실질적 일방주의의 전형적 사례는 패권주의 종속구조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적 조건 이외에도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의 경우에 는 일방주의적 대외행태가 부각된다. 2) 2차대전 이후 식민체제의 붕괴와 주권국가의 부상에 따라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정치지형의 심층적 지각변동을 경험한다. 그러나 식민체제의 일방주의를 대체하여 등장하는 주권체제가 요구하는 외교적 양자주의의 지역적 사회화가 지연되며 따라 동아시아는 형식적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실질적 일방주의의 틀에 직면한다. 그러한 현상은 식민체제의 왜해 직후 새로운 국가형성 초기단계라는 역사적 조건,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강화되는 민족주의라는 이념적 조건, 새로운 냉전체제의 구조적 역학에 따라 분화되는 긍정적 민족주의와 보수적 민족주의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조건이 작용한 복합적 결과이다(Alagappa 2003).


2) 미국의 과거 ‘모로주의(Monroe Doctrine)’는 강자의 실질적 일방주의인 반면, 미안마의 과거 ‘바마식 사회주의’는 약자의 실질적 일방주의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전환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구적 주권원칙을 절단적으로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식민체제의 역사적 유산으로 인하여 주권 국가의 영토경계가 모호하고 국민통합이 부진한 현실에서 주권원칙을 유지하는 일방주의적 관행이 퍼무이는 것이다. 식민체제의 해체에 따른 형식적 국민국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국가형성의 부진에 따라 양자주의의의 지역적 사회화가 저항되는바, 끝임없는 대내적 종족분쟁과 계급갈등, 대외적 국경분쟁과 이념갈등은 그 전형적 반증이다. 요컨대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국제관계의 급진적 현상가를 추구하는 중국의 ‘평화공존5원칙’은 보편적 규범이 아니라 선택적 전략에 불과하다.

1. 중국의 일방주의


그와 같은 '혁명국가'의 정체성은 핵심적 국가이익인 국가안보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에 있어서도 '방어적 현실주의'보다는 '공격적 현실주의'를 강화한다(Chen 2001: 6-10; Mearsheimer 2001: 17-22). 3) 1950년대 한국전쟁 및 1960년대 베트남전쟁 참전결정이 모두 중국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 제국주의의 위협으로 합리화된다(葛岩 2005). 4) 혁명투쟁에서 내면화

3) 국제관계의 '무정부성'에 대응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력'을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인식하는 '방어적 현실주의'는 세속군형의 현상유지를 추구하지만, '생존을 위한 최대한의 권력을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파악하는 '공격적 현실주의'는 세속군형의 현상유지를 추구한다(Mearsheimer 2001: 17-22).

4)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38도선 이북에 대한 미군의 진격을 계기로 결정되고, 베트남전쟁 참전은 17도선 이북에 대한 미군의 공습을 계기로 결정되는바, 중국영토에 인접한 한반도 및 베트남의 북부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바로 중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평
2. 동남아 일방주의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탈식민화를 가속하는 동남아 각국의 민족주의는 주권일치에 기초하는 국민국가의 건설에 있어서 식민시대의 구조적 유산으로서 종족적 ‘다중사회(plural society)’와 경제적 ‘이중사회(dual society)’를 통합적 국민국가와 자립적 국민경제로 전환하는 역사적 과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새로운 국민국가의 정체성은 ‘발견’ 아닐 ‘발명’의 대상으로서, ‘상상적 민족공동체’의 현실주의적 과제가 ‘상상적 지역공동체’의 이상주의적 과제를 우선하게 된다. 그러나 동남아의 지역적 정체성을 더욱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은 민족주의 자체보다 냅직체제의 구조적 원심력에 따라 급진적 민족주의와 보수적 민족주의로 양분되는 양극적 정치지형이다. 전자는 미국의 보수적 제국주의를 경계하고, 후자는 중

백한 위협으로 인식된다(구百家 2005).

정치적으로 종족적 '다중구조'를 국민적 통합구조로 재편하기 위하여 국민통합이 국가이익으로 설정되고, 그를 위한 효과적 전략으로서 '다중구조'의 종족적 우월력을 조장할 가능성이 다분한 권력의 분산보다는 국민적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권력의 집중을 추구한다. 독립 초기의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실험이 '다중사회'의 종족갈등이나 '이중사회'의 계급갈등으로 인하여 '연성국가(soft state)'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급진적 민족주의와 보수적 민족주의가 모두 국가권력의 수직적 위계구조를 강화하게 된다(Acharya 2000: 59-63). 전자는 '인민민주주의'로 정당화되는 전제주의적 정치체제를 추구하고, 후자는 '민족민주주의'로 합리화되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지향한다. 그러나 양극적 병전체제의 고착에 따라 그러한 민족주의는 모두 국가권력을 최우선적 국가이익으로 설정하는 '안보국가(security state)'의 정체성을 강화한다(Chai-Anan 1991).

1970년대에 이르면 미안마, 태국, 인도네시아의 군사정권,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문명정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공산정권 등이 모두 그러한 '안보국가'의 정체성을 공유한다.

정체적으로 일차산품 수출과 공업 제품 수입에 의존하는 종족적 석민 경제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경제발전이 국가이익으로 설정되고 수입대체 공업화가 기본전략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급진적 민족주의는 자립적 산업화를 추구하는 반면, 보수적 민족주의는 의존적 산업화를 추구한다(Acharya 2000: 51-54). 자립적이든 의존적이든 민족주의의 전략은 모두 국가주의적 경향을 공유한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는 모두 수입대체의 심각한 한계에 봉착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폐권주의적 병전체제는 민족주의적 주권체제의 제도화를 저해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 사이 공식
직 외교관계가 지연됨으로써 형식적 양자주의의가 대체되거나, 공식수교의 경우에도 실질적 상호협력이 부진함으로써 동남아 역내 국제관계가 전반적으로 형식적 양자주의의에 정체되는 상황이 1980년대 중반 냉전체제 해체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동남아 역내의 국제관계에서 실질적 일방주의가 풍미하는 것이다.

3. 중국-동남아관계


따라서 전반적으로 1978년 개혁개방 이전 중국과 동남아 각국의 상호관계는 형식적 양자주의의가 선택적으로 적용되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실질적 일방주의가 관철되는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 사이의 그와 같은 실질적 일방주의는 이념대립이 고조되는 세계의 구조적


IV. 양자주의의 전환

무관하게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강권적 일방주의가 외교적 양자주의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동남아 각국과 중국의 상호관계와 동남아 역내의 상호관계에서 확산되는 새로운 양자주의는 종전의 양자주의와 지극히 대조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첫째, 종전의 양자주의는 형식적 외교관계에 안주하는 반면, 새로운 양자주의는 실질적 상호협력의 확대와 심화를 추구한다.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 이후에도 실질적 상호협력이 부진하던 방전시대와는 대조적으로 상호협력의 외연적 범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그 내포적 수준이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 차원으로 심화되는 것이다. 둘째, 종전의 양자주의는 지역적 다자주의에 대하여 지극히 부정적인 ‘소극적 양자주의’인 반면, 새로운 양자주의는 지역적 다자주의에 대하여 상당히 공정적인 ‘적극적 양자주의’이다. 개별적 양자주의가 집단적 다자주의의 발전을 제도하는 ‘결림들’이 아니라 다자주의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디딤돌’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1. 중국의 양자주의

신국제정치질서와 신국제경제질서'를 표방하면서도 국제질서의 현상유지에 타협하는 보수적 정체성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체성은 "상호의존과 세계화가 심화되는 세계에서 고루한 웨스트فال리아(Westphalia) 국가주권 개념과 전부의 국가이익 정의"에 대한 강력한 집착을 드러낸다(Deng 1999: 47).


중국의 '평화공존 5원칙'은 1955년 반동(Bandung)회의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1997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과 함께 중국-동남아관계의 기본원칙으로서 지역적으로 합의되는 등 가장 일관되게 건지되는 중국의 외교노선이다. 5) 그 주권주의의 물시화(reification)는 "원자화된 국민국

---
5) 주권의적 존재, 내정불간섭, 분쟁 평화해결, 무력사용의 금지 등 1976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은 중국의 '평화공존 5원칙'과 유사하지만, 전사와 달리 후자는 세계국영의 보완수단에 불과하다(Alagappa 2003).

2. 동남아 양자주의

동남아 역내 각국의 상호관계는 탈식민화 이후 지속적 유통성을 드러내는바, 간헐적 일방주의적 행태가 양자주의적 외교를 교란한다. 사실 탈식민화 이후 정상적 양자관계가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1967년 이후 ASEAN 창설 5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정도에 불과하다(<표 3>). 따라서 동남아의 역내 국제관계에서 있어서 주권체제의 제도화는 양자주의적 접근과 다자주의적 접근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한 주권원칙의 사회화를 의미한다. 유럽이 1648년 웨스파리아(Westphalia)조약을 통하여 일방주의적 ‘흥스문화’를 탈피한 이후 20세기까지 3세기 이상이 소요되는 양자주의적 ‘로크문화’의 사회화를 기반으로 다자주의적 ‘칸트문화’에 진입하고 있는 반면, 동남아는 그 10분의 1에도 미달하는 기간에 ‘흥스문화’를 극복하고 ‘로크문화’와 ‘칸트문화’로 이행해야 하는 ‘이중전환’의 역사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다.

〈표 3〉 동남아 각국의 최초 수교 및 최근 복교

<table>
<thead>
<tr>
<th></th>
<th>태</th>
<th>필</th>
<th>인</th>
<th>말</th>
<th>싱</th>
<th>브</th>
<th>미</th>
<th>베</th>
<th>라</th>
</tr>
</thead>
<tbody>
<tr>
<td>태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필리핀</td>
<td>4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인도네시아</td>
<td>50</td>
<td>4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말레이시아</td>
<td>57</td>
<td>59-64</td>
<td>57-6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싱가포르</td>
<td>65</td>
<td>69</td>
<td>66</td>
<td>6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브루나이</td>
<td>84</td>
<td>84</td>
<td>84</td>
<td>84</td>
<td>84</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미얀마</td>
<td>48</td>
<td>56</td>
<td>49</td>
<td>58</td>
<td>66</td>
<td>93</td>
<td>-</td>
<td></td>
<td></td>
</tr>
<tr>
<td>베트남</td>
<td>76-91</td>
<td>76-91</td>
<td>55-91</td>
<td>73-91</td>
<td>73-91</td>
<td>92</td>
<td>75</td>
<td>-</td>
<td></td>
</tr>
<tr>
<td>라오스</td>
<td>50-89</td>
<td>62-91</td>
<td>57-91</td>
<td>66-91</td>
<td>74-91</td>
<td>93</td>
<td>55</td>
<td>62-77</td>
<td>-</td>
</tr>
</tbody>
</table>


3. 중국-동남아관계

### 표 4 동남아 각국의 대중관계

<table>
<thead>
<tr>
<th>국가</th>
<th>독립</th>
<th>수교</th>
<th>단교</th>
<th>복교</th>
<th>정조약</th>
</tr>
</thead>
<tbody>
<tr>
<td>카마בוד아</td>
<td>1953</td>
<td>1958</td>
<td>1979</td>
<td>1983</td>
<td></td>
</tr>
<tr>
<td>말레이시아</td>
<td>1957</td>
<td>1974</td>
<td></td>
<td></td>
<td></td>
</tr>
<tr>
<td>태국</td>
<td></td>
<td></td>
<td></td>
<td></td>
<td>1975</td>
</tr>
<tr>
<td>필리핀</td>
<td>1946</td>
<td>1975</td>
<td></td>
<td></td>
<td></td>
</tr>
<tr>
<td>싱가포르</td>
<td>1965</td>
<td>1990</td>
<td></td>
<td></td>
<td></td>
</tr>
<tr>
<td>브루나이</td>
<td>1984</td>
<td>1991</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감보디아침공과 1979년 중국의 베트남침공 이후 베트남에 대응하여 강화되는 ASEAN과 중국의 안보협력과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라 접종하는 경제협력은 지역적 차원의 복합적인 실질정치를 촉진한다. 1989년 세계적 차원의 복합적인 외교정치는 베트남의 침공 이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자본주의권과 베트남, 라오스, 감보디아 등 사회주의권에 대한 중국의 양자관계가 수교 또는 복교를 통하여 정상화됨에 따라 실질적 양자주의는 1990년대에 정착되는 것이다(표 4).

따라서 동남아 연대에서 실질적 양자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자본주의권 내부의 경우뿐이라 할 수 있지만, 태극을 비롯하여 필리핀(1946년), 인도네시아(1949년), 말레이시아(1957년), 싱가포르(1965년), 브루나이(1984년) 등은 그 탈식민화의 진전에 따라 상호 외교관계가 발전한다. 그 경우에도 1963년 말레이시아연방의 결성 및 사바(Sabah) 영유권에 관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분쟁, 1965년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연방 이탈, 1990년대 남사공도(Spratley) 영유권에 관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중국의 분쟁 등 국경문제가 간헐적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967년 ASEAN 창설 이후 장기적,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자본주의권의 양자주의에 대한 경험의 축적과 학습의 심화는 1990년대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을 관통하는 양자주의의 지역적 제도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V. 시장의 다자주의

세계적 차원이든 지역적 차원이든 국제질서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자주의는 “3개 이상 국가들의 집단에서 국가정책을 조정하는 관행”이라는 양적, 절차적 조건 이외에도 “3개 이상 국가들의 집단에서 그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일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정책을 조정하는 관행”이라는 질적, 규범적 조건의 충족을 요구한다(Ruggie 1993: 6-7). 전자는 형식적 다자주의로서 진정한 다자주의의 필요
조건을 구성하며, 후자는 실질적 다자주의로서 진정한 다자주의의 충분조건을 제공한다. 1개 국가의 강권적 요구가 관철되는 일방주의나 2개 국가 사이의 외교적 협상에 의존하는 양자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진정한 다자주의는 3개 이상 국가 사이의 규범적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방주의는 주권원칙을 부정하는 패권주의적 국제제도인 반면, 양자주의는 주권원칙을 과장하는 특수주의적 국제제도이다. 그러나 다자주의는 내면화의 계기나 사회화의 수준이 강각(위협), 이익(교환), 가치(통합)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원칙에 기초하면서도 국가주권에 대한 평등한 상호제약을 수용하는 보편주의적 국제제도이다.

1. 중국의 다자주의


2. 동남아 다자주의


3. 중국-동남아관계

집단안보 대신 양자동맹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세력균형이 지역안보의 중추적 기제로서 작용하는 동아시아의 정치지형에서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을 위한 중국과 동남아 사이 지역적 다자주의의 전진은 지극히 획기적인 현상이다. 아직 전통적 세력균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실 식민체제와 냉전체제의 강권적 일방주의에 대한 '반사적' 민족주의에 따라 국가주권에 대한 점착이 강화되는 동남아와 중국은 안보부분의 다자협력에 비하여 경제부분의 다자협력에 더욱 적극적이다. 중국에 대한 ASEAN의 수출 및 수입은 2003년에도 전년대비 각각 51.7% 및 31.2% 증가하는 등 ASEAN은 이미 중국의 5대 수출시장 및 4대 수입시장이다. 2002년의 포괄경제협력기본협정은 중국과 ASEAN의 자유무역지대 (ACFTA)를 추진하는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선발 6개국은 2010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후발 4개국은 2015년이 최종목표로 설정된다. 그러한 다자협력은 농업, 정보통신기술, 인력자원개발, 매공유역개발(MRB), 상호투자 등 5개 우선 부문과 SARS 예방통제,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다양한 '기능부문'으로 확대된다.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의 국경지대에 확산되는 경제무역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전장'은 이미 '시장'이다.

VI. 지속과 변화

국제관계에 대한 접근시각에 있어서 문화적으로는 '흡스문화'에서 '칸트문화'까지, 제도적으로는 일방주의에서 다자주의까지, 이론적으로는 현실주의에서 자유주의까지 광범한 스펙트럼이 드러나는 동남아와 중국의 상호관계는 일정한 계속성과 다양한 가변성을 내포한다. 그와 같이 다양한 동남아와 중국의 동향에 비추어 현실주의적 주장과는 달리 동남아와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 국제관계의 '무정부성'이나 국가역량의 배분구

7) 남중국해의 영유권분쟁과 관련하여 2002년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5개국은 '남중국해행동수칙'에 합의하고, 2005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3개국은 '남중국해 공동개발'에 합의한다.
조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동남아와 중국의 상호관계는 물론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에 대한 전망은 일방주의적 ‘홉스 문화’에서 양자주의적 ‘록스문화’와 다자주의적 ‘카트문화’로 이행하는 급속한 문화변동에 대한 경험이에서 도출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미래는 ‘유럽의 19세기’나 ‘아시아의 전통’이 아닌 최근의 실천적 경험으로부터 부상할 것인데, 사실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그 점에 있어서 군사, 기술, 경제 등 물질적 차원의 구조적 조건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합리주의적 접근사항은 이념, 문화, 가치 등 관념적 차원의 주체적 선택에 주목하는 구성주의적 접근사항에 충분히 포섭된다.

일방주의, 양자주의, 다자주의가 적응하는 제도적 증증성은 중국-동남아 관계의 계속성을 표현하며, 각국 대외정책의 무개중심이 이동하는 전략적 역동성은 중국-동남아 관계의 가변성을 표현한다(<표 5>). 일방주의를 탈피하여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중국-동남아 관계의 동향은 일방주의를 향한 과거지향적 변화가 아니라 다자주의를 향한 미래지향적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나 동남아와 중국 사이 각종 다자협력의 발전은 ‘평화공존 5원칙’과 ‘ASEAN 방식’의 주권주의적 공동체에 기인하는

〈표 5〉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방전체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베트남전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미중전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중국개방</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냉전종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경제위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것이므로 (Wang 1999: 91-93), 제도적 다자주의의 기초로서 외교적 양자주의가 계속 갱신될 것이다. 다자주의가 폐권주의의 일방주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동원되는 현실에 대한 중국의 비판은 역사로 국가이익이 요구하는 경우 중국도 언제든지 일방주의에 의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의 경우 여전히 형식적 다자주의가 실질적 다자주의를 압도하며, 다자주의는 양자주의적인 ‘대국외교’의 보완수단일 뿐이다. 동남아 경우에도 ‘미얀마문제’의 교착상태가 반증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 다자주의에 대한 ‘ASEAN 방식’의 제약이 여전히 심각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거시적 전망은 동남아 각국 및 중국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동이라는 국가적 변수는 물론 지역적 및 세계적 변수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동남아 상호관계나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미래는 세계적 세력균형의 구조적 동향-일극화 또는 다극화-에 대응하여 각국의 분열적 정체성이 국가(‘위’)로부터의 하향적 운동과 사회(‘밑’)로부터의 상향적 운동이 세계(‘밖’)로부터의 대향적 운동에 대한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떠한 통합적 정체성으로 구성되는가에 달려 있다 (Kim and Dittmer 1993). 정치체제, 인권문제, 영토분쟁, 종교간동, 종교적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일방주의적 행동 가능성이 상존한다. 지역폐권의 잠재적 역량이 지대한 중국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민족주의적 목적에 따라 수용되는 다자주의의 국제제도의 내면화가 장기적으로 다자주의적 침투문화의 사회화를 향한 문화변동을 촉진할 수도 있다 (Christensen 1999).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에 대한 전망은 이론적 시각에 따라 첨예하게 대조적이다. 현실주의적 시각은 민족주의의 강화에 따라 가열되는 중국과 일본의 폐권경쟁을 예상하고 전통적 세력균형을 그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자유주의적 시각은 지역주
의 확산에 따라 심화되는 복합적이고 중대적인 상호의존을 예측하고 다자주의적 지역통합을 그 전략적 기획으로 제시한다. 그와 같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론적 시각은 모두 구조적 조건에 대한 물질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에 편향되어 행위주체, 즉 국가의 동질성과 계속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식민체제의 붕괴 이후 냉전체제의 고착, 균열, 해체 등 각 단계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 각국은 경제성과 이익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과시한다. 따라서 각국의 경제적 자유화와 정치적 민주화가 수반하는 사회적 자율성과 문화적 다원성을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자유화와 정치적 민주화는 상호의존과 다자주의를 촉진함으로써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지역질서의 사회화와 제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Deng 2000: 59-61).


許聖達·馬勇·王士泉. 1998. 『走向21世紀的東南亞與中國』. 昆明: 雲南大學出版社.
王泰平編. 1999. 『新中國外交50年』. 北京: 北京出版社.
唐希中·劉少華·陳本紅. 2003. 《中國與周邊國家關係》.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Abstract

From Battlefield to Marketplace:
Changes and Continuity in China-Asean Relations

Sa-Myung Par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interactive relationship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since the 1950s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emphasizing the role of ideational and cultural factors over the role of material and structural factors stressed by realism and liberalism. National identity and interest are constructed through social interactions, but not dictated by structural imperatives. From the 1950s through the 1970s, the radical identities and interests of China and Southeast Asian states as enemies in the ‘Hobbesian culture’ followed the disintegration of colonialism, leading to the rapid spread of coercive unilateralism. In the 1980s, however, the pragmatic identities and interests of China and Southeast Asian states as rivals in the ‘Lockian culture’ promoted their bilateral cooperation, laying the basis for the full development of diplomatic bilateralism in the 1990s. As a result, the 1990s witnessed the gradual growth of multilateral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making possible the gradual construction of a new regional identity and interest as friends in the ‘Kantian culture’. While
continuities are represented by the complex cultural combination, changes are suggested by the dynamic cultural transition. Thus, the prospects for a multilateral order in East Asia will depend on the direction of ideational interaction along the wide ideational spectrum from the ‘Hobbesian culture’ of unilateralsm through the ‘Lockian culture’ of bilateralism toward the ‘Kantian culture’ of multilateralism.

Key words: unilateralsm, bilateralism, multilateralism, continuity, change.